‘저축銀 비리’ 정관계 로비 수사 급물살

검찰, 은진수 전 감사위원 소환 고강도 조사

또 다른 브로커 소망교회 집사 박씨 해외 도주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9일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부의 중추 사정기관인 감사원 감사위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저지른 비리 의혹에 휘말려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변호인 없이 홀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법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은씨는 또 “다소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실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알려진 혐의사실과 이를 전한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은씨는 7조원대 금융비리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현금 7000만원과 시가 3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은씨의 친형도 따로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측근이자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윤여성(56·구속)씨에게서 “은진수 위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씨는 윤씨로부터 지난해 감사원의 요구로 이뤄진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메일을 통해 영업정지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다른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도 퇴출을 막기 위한 구명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은씨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 26일 사표를 내 수리된뒤, 변호인과 검찰 수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미 구속된 금융브로커 윤씨와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또 다른 로비 창구로 지목되는 브로커 박모씨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60대 후반의 소망교회 집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 정권 실세와 가깝고 지난 3월 검찰의 공개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07 대선 ‘BBK 의혹’ 공세 막아낸 MB맨

소환 은진수 前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검찰 재직시절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공인회계사 시험(17회), 사법고시(30회), 행정고시(34회)에 잇따라 합격한 뒤 부산지법 판사와 서울지검 검사를 지냈다.

1993년 슬롯머신 사건 실무 검사로서 슬롯머신 업자인 정덕진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건개 전 고등검사장 등을 구속, 주목을 받았다. 당시 홍준표 주임검사를 비롯해 정선태(현 법제처장), 김홍일(현 대검 중수부장) 등 서울지검 강력부 소속 6명의 검사가 팀을 이뤄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했다.

제17대 대선 때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BBK팀장을 맡아 BBK 주가조작 의혹 공세를 막아내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2009년 2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차기 총선 출마가 거론됐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저축銀 비리 구속 해동건설 박형선 회장

서광주세무서 상대 로비 검찰수사 촉각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서광주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로비가 있었는지를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9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형선(59·구속)씨가 지난 2008년 하반기 서광주세무서의 경기도 모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광주세무서는 영광에 거주하던 이 법인 명의 소유자가 숨지면서 당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벌였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 부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씨에게 1억5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무마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 수사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서광주세무서가 거론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관련 서광주세무서가 거론돼 유감스럽다. 검찰에서 서광주세무서에 조사자와 조사기간에 대한 질의를 했고, 서류를 가져간 일은 없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세무조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日만평

- 김종두

그나저나 설것이는 또 국민몫이냐?!

■ ‘예속 자치’ 언제까지 5 대안은 없나

권한·재정 이양해야 ‘10할 자치’

지방분권 보장 헌법에 명시해야

내년 대통령선거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표를 얻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선심성 국책사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사무와 재정, 입법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자립해 특징과 장점을 부각시켜 지역발전,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 이르게 하는 시스템의 도입은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03년 결국 실패로 끝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과정에서 보듯 중앙관료의 기득권 유지 집착, 정치권의 이해득실, 각 지방자치단체 간 공조 미흡 등은 여전히 이를 가로막는 높은 장벽이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결국 지역 및 국가 발전의 토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단기간에 권한 및 재정을 이양, 정착하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정부와 협상 기구로 격상

선심성 국책사업 투표로 차단 진정한 자치실현

◇권한·재정 이전 위한 협상기구 만들자=전국 16개 광역지자체들은 이미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후 2005년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정부의 공동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처까지 발족시켰으나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넘겨받기 위한 노력은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자체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에 기댈 뿐 재정과 함께 권한과 책임을 짊어지는데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여건에 대한 감안 없이 무턱대고 대규모 사업을 일으켰다가 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중앙정부가 정해준 틀 내에서만 사업이나 정책을 고민하는, ‘예속 자치’를 자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지자체들은 인구·경제규모·현안 등이 다른데다 동남권 신공항 조성,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문제, 새만금개발사업 등 개별 국책사업이나 정부 지원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으면서 적극적인 ‘공조’보다는 느슨한 ‘협의’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여전히 관리·감독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 변함이 없는 것은 이 같은 지자체의 자세도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협의회를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상하는 기구로 격상하고, 각 지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질적 지방분권 위해 헌법 개정을”=이미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문제해결방식은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일자리창출, 도시계획 등 각 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대한 감안 없이 능률만 강조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각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온전히 지방자치단체, 지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정부에 의한 수직적 관료체계의 한계이며,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사무이양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산재돼 있는 지방분권 관련 제도를 헌법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순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주발전연구원의 ‘광주연구’ 2011년 1호에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해 고작 2개의 조문, 4개 항, 6개 줄이 있을 뿐 그것도 형식적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조례입법권의 확대, 지방의 책임 강화 등을 담은 헌법 만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조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 확충 위해 제도 개선하자=광주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지방세제 개편,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체세입은 감소 또는 정체 상태에 있지만 사회복지비, 국고보조 매칭 부담, 법정 의무경비 수요 등이 급증하면서 재정 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는 광주시만이 아니라 광역지자체·기초 지자체 모두의 문제이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대규모 국책사업에는 수조원을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지자체의 재정 개선을 위한 구조 개선에는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우선 ▲지방소비세 세율의 파격적인 인상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사회복지 및 환경기초시설 분야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인균 광주시 정무특보는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 청와대 및 정부부처 방문 등에서 광주시만 유일하게 껍데기뿐인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들간 협력을 통해 지방재정과 자치권한 등 제도적 한계를 공론화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조만간 광역시장정책협의회에서 지방정부로의 재정 및 권한이양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끝〉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